

번 적십자회담에서는 추석계기 상봉행사의 세부 일정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남북은 추석계기 상봉행사에 대해서는 큰 의견 차이 없이 합의하였으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간다는 수준에서 합의하여 2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 요지

1. 남과 북은 9.26~10.1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 상봉규모는 각각 100명씩 실시
 - 9.1 생사확인 의뢰(200명), 9.15 회보서 교환, 9.17 최종명단 교환(100명)
 - 단체상봉은 금강산 면회소, 개별상봉은 금강산 호텔 등 기존시설 활용
 - 선발대 사업은 상봉 5일전부터 진행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등 적십자 인도주의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견지에서 계속 협의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2년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하였다.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2009년 10월 16일 개성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에서 진행되었다.

남북 대표단 명단

구 분	우 리 측	북 한 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 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리동혁(민화협 참사)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3원칙을 재강조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을 전달하였다. 2009년 내에 이산가족 추가 상봉을 하고, 2010년 설 계기에도 상봉행사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아울러 이산가족 면회소의 정상운영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산가족면회소 사무소의 남북대표 상주문제와 면회소를 통한 상시 상봉문제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앞서, 우리측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남북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인도적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제4절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

북한은 우리 정부가 2008년 제 63차 유엔총회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데 반발하여, 2008년 11월 12일 판문점 남북연락 사무소간 직통전화 단절 등 남북간 연락업무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는 북한조문단 방문(2009.8.21~23), 남북적십자회담(2009.8.26~28)을 계기로 2009년 8월 25일 재개되었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재개 이후 이루어진 2009년도 남북간 연락업무는 직통전화 운용 226회, 남북 연락관 접촉 14회, 전화통지문 수·발신 24건, 북한 선박조난 등 긴급 구난활동 5회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31일까지 남북간 연락업무는 직통전화 운용 218회, 남북 연락관 접촉 6회, 전화통지문



남북 연락관 접촉

수·발신 22건, 북한 선박조난 등 긴급 구난활동 1회 등이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국방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2010.5.20)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발표(2010.5.24)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여 또 다시 2010년 5월 26일 판문점 남북연락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로써 2009년 8월 25일 정상화 되었던 판문점 남북직통전화 등 남북연락업무가 9개월 만에 다시 중단되었다.

판문점 남북연락업무 재개(2009.8.25) 이후 남북간 주요 연락내용

연도	월별	주요 연락내용
2009년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특사조의방문단」 출·도착상황 통보 및 비행운항계획서 전달 • 남북적십자회담(8.26~28, 금강산) 관련 전통문 접수 및 협의사항 통보 • 「연안호」 귀환 관련 전달사항 통보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9.21~10.1, 금강산) 관련 문건 교환 및 실무절차 • 협의 '북측의 임진강댐 무단방류' 관련 '국회의장' 명의 대북서한 전달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강 실무회담」 (10.14, 개성) 및 「적십자 실무접촉」 (10.16, 개성) 관련 전통문 교환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선박 「주작봉 5호」 피항 관련 전달사항 통보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플루 치료제' 지원(12.18, 개성) 관련 전통문 및 전달사항 교환 • 북한선원 7명 대북송환 관련 전통문 발송 및 송환 실시
2010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 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선원 송환 통보(1.5)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실무회담 대표단 명단 교환(2.5) • 손 소독제 지원 관련 통보(2.19) • 의약품 및 분유지원 관련 전달사항 통보(2.26)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수수 1만톤 지원/금강산·개성관광 관련 통보(3.15)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관련 통보(4.1)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동결 및 관리인원 추방조치 철회 요구 통보(4.9)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령도 해상을 통해 남측에 온 북한 주민 송환 요구 전통문 접수(5.12) • 판문점 적십자 연락대표 사업 중지 및 통신연계 단절 전통문 접수(5.26)





05

통일교육

-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정립
- 제2절 통일교육 실시
- 제3절 통일교육 지원
- 제4절 통일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제5장 통일교육

제1절 통일교육 추진체계 정립

1. 통일교육 기본방향 제시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헌법과 통일교육 지원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및 『통일교육 지침서』를 발간하여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통일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부는 「2009 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로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미래세대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실시’ 등을 제시하였고, 「2010 통일교육 기본계획」에서는 ‘현장중심의 통일교육 확산’, ‘학교 통일교육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통일교육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2.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지역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 체계 개선을 통해 통일교육의 성과를 높이고자 이춘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09년 10월 19일 공포되었다. 개정 통일교육 지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통일교육전문강사의 양성, 통일교육위원 위촉 등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역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통일교육 지원법에 명시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 노력을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제8조를 개정하여 학교통일교육 진흥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였다.

셋째, 제9조의2를 신설하여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통일교육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통일교육 전문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전문과정」을 운영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그동안 통일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어 왔던 통일교육위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통일교육 지원법」이 2010년 4월 20일 시행됨에 따라 통일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3. 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정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사이버통일교육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9년 9월 3일 통일교육원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하였다.

운영규정에서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스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책임자, 시스템관리자, 사용자 등 각 역할에 맞는 업무범위와 처리절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통일교육원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통일교육 콘텐츠를 비롯하여 교원·공무원사이버통일교육, 사이버방북안내교육 시스템에 저장된 각종 정보를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제2절 통일교육 실시

정부는 각종 사회단체 임원·회원, 교사 등 교육 관계자, 중앙과 지방의 공무원 등 각계 여론주도층을 통일교육원으로 직접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초청교육과 시·공간의 제약 없이 통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도 초청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정, 사회 통일교육과정, 공무원 통일교육과정, 통일미래 지도자과정, 방북 안내교육 등으로 구별되어 실시되었고, 2009년에 총 6,155명, 2010년 6월말 현재 2,750여 명이 교육에 참가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과정을 확대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새롭게 운영하였다.

1. 초청교육 내실화

가. 학교 통일교육과정

학교 통일교육과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대학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2009년도에는 2008년(1,452명)보다 59% 증가한 총 2,474명이 과정을 이수하였고, 2010년에는 6월말 현재 1,030여 명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현황과 정부의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실상과 북한 핵문제, 안보환경 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